

'3자 변제' 골자... 정부, 일제 강제징용 피해 배상 해법안 발표

피해자-유족 강력 반발... 험로 예고

정부가 한국 주도의 '제3자 변제' 방식을 골자로 하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 배상 해법안을 6일 공식 발표했으나 피해자와 유족이 강력 반발할 것으로 보여 추진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우리 정부 산하 재단이 돈을 걸어 일본 피고 기업 대신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로 승소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다.

일본 피고 기업들의 배상 참여는 물론 이 사안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직접적 사과도 빠져 있어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또 정부안에 동의하지 않는 피해자와 유족들이 무효 소송으로 맞붙을 수 있어 징용 문제 배상을 완전히 매듭짓기에는 많은 난관이 예상된다.

박진 외교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2018년 대법원의 3건의 확정판결 원고에게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방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국내 기업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배상한다는 것으로 포스코 등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의 한국 쪽 수혜기업으로부터 출연금을 받아 재원을 일단 마련할 것으로 점쳐진다.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는 15명인데 이들에게 지급해야 할 판결금은 지연이자까지 약 40억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재원과 관련하여서는 "민간



박진 외교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 배상 해법 발표를 하고 있다.

日 대신 국내기업 돈으로 배상... 직접 사과도 빠져 배상금 거부하고 정부에 무효 소송 제기 가능성

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 마련하고, 향후 재단의 목적사업과 관련한 가용 재원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쟁점이 됐던 '직접 사과'도 일본의 거부로 이뤄지지 않았다. 대신 일본은 식민 지배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담은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 등을 계승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예정이다.

박 장관은 이번 정부안에 대해 "대한민국의 높아진 국격과 국력에 걸맞은 대응적 결단으로서, 우리 주도의 해결책"이라며 "대법원 판결을

준중하면서 실질적 해법을 제시하고 과거를 기억하는 노력이다. 즉 문제 해결의 '끝'이 아닌 진정한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일 양국이 1998년 10월에 발표한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발전적으로 계승해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화해와 선린우호협력에 입각한 미래지향적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정부는 다만 양국 재계를 대표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일본경제대

체연합회 게이단렌이 청년들을 위한 '기금' 조성에 나서고 여기에 피고 기업들이 일정 부분 출연하는 '우회 참여' 방식을 추진 중이다.

남은 관건은 피해자들의 수용 여부다. 피해자 측은 제3자가 재원을 만든다 해도 피고 기업이 일부나마 참여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강제징용 소송 법률대리인 중 한 명인 법무법인 해미루 임재성 변호사는 지난달 간담회에서 "정부안을 수용할 수 있는 분도 존재하고 그렇지 않은 분도 존재한다"며 "제가 대리하는 사건 가운데 일본 제철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한 분들은 부정적"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이 최근 면담한 유족들도 일본의 직접 어린 사과를 강조하면서도 정부안 동의 여부에 대해선 의견이 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일본 기업을 상대로 승소한 피해자와 유족 일부가 배상금 수령을 거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되면 정부는 피고 기업과 채무인수 계약을 체결해 채권자 동의 없는 채권소멸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피해자 쪽에서는 무효 소송에 나서는 등 법적 대응으로 맞설 수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직접 소통한 결과 상당수 유가족은 소송 장기화에 따른 피로감과 현실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어떠한 방식으로든 조속한 해결을 희망했다"며 "피해자 및 유가족을 대상으로 정부 해법안과 이후 절차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판결금 수령 관련 이해·동의를 구하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尹 기금본부 서울이전 지시설에 도-국민연금 "사실이 아니다"

도 "소재지 변경 위해서는 국회 법안 개정 필요"

최근 일부 언론에 보도된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서울 이전 지시설에 대해 전북도와 국민연금공단이 "사실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전북도 관계자는 "일부 언론 보도를 확인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해당 설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통화를 했다. 사실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 처음부터 터무니없는 이야기였다"고 6일 밝혔다.

최근 "윤 대통령이 전북 전주 소재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서울 이전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는 보도가 나왔다. 국민연금 기금의 운용 수익률과 인력유출 문제 등을 언급하며 전주 이전 리스크 논란을 재점화시켰다.

전북도 관계자는 그러나 "(명백한) 가짜뉴스"라면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소재지는 국민연금법(제77조)에 명시돼 있다. 소재지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김태원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도 "대통령실에서 관련 내용과 관련해 들은 바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뉴시스

도의회 임시회 오늘 개회... 16일까지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도 추경 등 처리 예고

전북도의회(의장 국주영은)는 7일부터 오는 16일까지 제398회 임시회를 열고 10일 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8~9일 이틀간 8명의 의원이 도지사와 교육감을 상대로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관한 질문을 발의한다. 또한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전라북도 제회 추경장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 26건의 안건과 긴급 건의·결의안을 심의할 계획이다.

먼저 7일에는 개회식 이후 제398회 임시회 회기 결정 및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고,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한다. 이어 도지사로부터 2023년도 전라북도 제회 추경장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한 뒤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및 대장동 50억 클럽 관련 생특검 도입 결의안', '농사용 전기 적용 대상 확대 건의안', '신동진씨 공공비축미 매입 제한 및 보급종 공급 중단 계획 철회 촉구

건의안' 등의 대정부 건의·결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2023년 들어 처음 열리는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관한 질문은 8일에는 윤정훈(무주)·윤수봉(완주)·김술지(비례)·김성수(고창)1) 의원이, 9일에는 오은미(순창)·양해석(남원)2)·장영국(비례)·김정수(익산)2) 의원이 각각 도지사와 교육감을 대상으로 각종 현안에 대한 질문을 실시한다.

또한 이번 회기에는 전북도의 요청으로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캠퍼리 국제 캠프에 따라 도비 편성 등을 위해 전북도 제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각 상임위원회는 위원회에 회부된 각종 안건(조례안 24건, 예산안 1건)을 심사하고, 주요 사업 및 민생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상임위원회 심사 안건은 오는 16일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한다. /김재훈 기자

'제3자 변제'에 민주 "일본에 항복 선언... 즉각 파기하라"

'강제동원 모임' 소속 의원 53명 기자회견문 발표

더불어민주당은 6일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방식으로 '제3자 변제'를 택한 것과 관련해 "사실상 일본에 항복을 선언한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주당 '일본의 강제동원 사죄와 전범 기업의 직접배상 이행'을 촉구하는 의원 모임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강제동원 문제의 최종 해법으로 일본의 사죄와 전범기업의 배상 없이 한국 기업의 재원으로 한국 재단이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을 추진하겠다고 확정 발표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한 식민 지배에 대한 일본의 반성과 사죄가 포함된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계승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 표명을 강제동원에 대한 사죄로 수용하겠다고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 발표는 일본의 사죄와 전범기업의 배상 없는 돈은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받지 않겠다"는 양극덕 할머니 등 강제동원 피해자의 절규를 철저히 무시하고 능멸한 것"이라며 "강제동원 의원 모임 소속 53명의 국회의원은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에 정부가 제시한 해법은 일본 정부의 진정한 사죄와 전범기업의 배상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력히 추궁했다.

의원 모임은 "이번 발표는 피해자인 한국이 가해자 일본에 머리를 조아린 항복 선언으로 한일관계 역사상 최악의 외교 참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대일 굴욕 외교의 나쁜 선례로 남아 후세 후손에게도 사도광산, 후쿠시마 오염수 등 산적한 대일 외교 현안 협상 과정에서 한국의 발목을 잡으며 풀이할 수 없는 후과를 양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본의 강제동원 사죄와 전범기업 직접배상 촉구 의원 모임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강제동원 제3자 변제 해법강령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피해자 절규 철저히 무시하고 능멸... 강력 규탄 최악의 외교 참사... 대일 협상서 韓 발목 잡을 것'

또 "제3자 변제 해법 어디에도 정부가 강제동원 문제 해결의 조건으로 강조해온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 조치는 찾을 수 없다"며 "이번 정부 발표로 더욱 오만해진 일본이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가능성 또한 전무하다"고 했다.

대법원 판결을 무시한 대책이라는 비판도 이어졌다.

의원 모임은 "제3자 변제 해법은 일본의 한반도 지배와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 강제동원은 불법이며 피해자들의 위자료 청구권은 한일 청구권협정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법치의 부정"이라며 "민주주의의 근간인 삼권분립 정신의 훼손이며 심각한 국가문란 행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범기업 배상 참여 대신 미래청년기금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에는 "한국 청년을 일본의 적선 대상

으로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육박하는 기만이자 몰타기용 꼼수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제3자 변제' 방식 결정을 주도했다는 주장도 펼쳤다. 김상희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정부의 발표는 전적으로 대통령의 의중"이라며 "앞으로 벌어지는 모든 사태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당시자가 제3자 변제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강행하고 싶어도 강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지금까지는 일본 정부 전범기업과 피해자들 간 싸움이었던 앞으로는 정부와 피해자들의 싸움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철회를 촉구했다. /뉴시스

김경민, 전주를 재선거 국민의힘 후보 확정

국민의힘 전북도당은 6일 중앙당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정진석) 의결을 거쳐 4·5 재선거 전주시에 국회의원 후보자를 김경민 예비후보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경민 예비후보는 "집권여당의 힘으로 더 늦기 전에 전주에 대한화를 가져오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잘 사는 전부를 만드는데 밀착참여가 되겠다"고 말했다.

김 예비후보는 "정운천(비례대표), 이용희 의원(남원·임실·순창)과 함께 전북에서 협치가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뉴시스



"고창 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 선정 환영"

민주 윤준병 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은 고창군 상하면 장호리 일원에 위치한 '장호어촌체험휴양마을'이 해양수산부가 공모한 '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사업'에 선정돼 국비 2억원을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

고창군이 선정된 '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사업'은 자연 경관이 뛰어나고 어촌을 체험할 수 있는 자연여건을 갖추고 있고,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마을을 대상으로 체험장, 숙박시설 등 어촌체험휴양마을 운영을 위한 기반 시설을 만들어 체험객이 즐겁고 편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올해 2월 해양수산부 공모에 신청해 선정된 '장호어촌체험휴양마을'에 부속했던 숙박시설 건립과 탐방로 보수 등 기반시설 조성·개선을 통해, 체험객 편의성 및 해양치유를 위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관광객 만족도가 제고될 전망이다.



그간 윤준병 의원은 공모사업 진행·선정까지 해양수산부 관계자들에게 '장호어촌체험휴양마을'이 선정되어야 하는 당위성 및 필요성을 이

야기하며 고창군이 선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했다. 윤준병 의원은 "장호어촌체험휴양마을은 4Km가 넘는 명사십리 백사장의 환상적인 경관을 가지고 있는 마을이다"며, "장호어촌체험휴양마을이 가지고 있는 자산과 천혜의 해양기후 및 경관을 활용한 특화마을로 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의원은 "공모 선정을 위해 함께 애써주시는 심덕섭 고창군수를 비롯한 전북도 및 고창군 관계 공무원 그리고 주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민주 안호영 의원, 무주군 의정보고회로 의정보고 일정 마무리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지난 4일 무주군 전통문화체험관에서 무주군 의정보고회를 마치고 한 달여간의 지역 의정보고 일정을 마감했다.

이날 행사에는 황인홍 무주군수와 윤정훈 도의원, 오광석 무주군의회 부의장을 비롯한 군의원, 지역위원회 주요 당직자와 당원 등 완주군민 200여 명이 찾아 성황을 이뤘다. 또한 완주·진안군의원들도 현장을 찾아 2023년 마

지막 의정보고 일정에 힘을 더했다. 안호영 의원은 "불기운이 완연한 귀한 주말에 시간을 내어 함께해주신 군민께 감사하다"라고 입을 떼며 "2022년 한해 무주군민의 지지와 성원을 통해 삼아 당 수석대변인 활동과 무주발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할 수 있었다"라고 인사를 전했다.

안호영 의원은 "3년 만의 대면 의정보고회의 유종의 미를 무주에서 거두게 되어 굉장히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총부한 역사와 문화 자원을 충분히 활용해 대한민국이 찾는 관광명소 무주, 사람이 찾고 머무는 무주를 만들겠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무주=전문선기자

